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284 |
|----------|------|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한창민·박주민·박은정
조 국·윤종오·정춘생
강경숙·정을호·박정현
용혜인·김 윤·서미화
문정복·강유정·김선민
차규근·민병덕·전종덕
서왕진·정혜경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를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공공복리”로 한다.

제2조 중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며,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을 만드는”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6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및 제1절의 제목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

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을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고령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인구정책 및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제23조에 따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저출생·고령사회정책”으로,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으로, “25인”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고령화 및 저출산”을 “저출생 및 고령사회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제3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

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3(시·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정책기획단을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도위원회와 시·도 인구정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전단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30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인구구조 불균형이”를 “인구구조변화가”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31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u> | <u>저출생 · 고령사회기본법</u> |
| 제1조(목적) 이 법은 <u>저출산</u>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u>저출산 · 고령사회정책</u> 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u>저출생</u> ----- ----- ----- <u>저출생</u> ----- ----- ----- <u>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u> ----- ----- <u>공공복리</u> -----.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u>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u> 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u>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며,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을 만드는</u>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 <u>저출산 · 고령사회정책</u> ”이라 함은 <u>저출산</u>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저출생</u> ----- ----- <u>저출생</u>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 · 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저출생

-----저출생

저출생-----
-----.

②-----

-----저출생-----
-----.

제5조(국민의 책무) ①-----

-----저출생-----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출생-----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 출산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 · 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 · 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 중 ·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제2장 저출생-----

제1절 저출생 대책

제7조의2(인구교육)-----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인구정책 및 저출생 · 고령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저출생-----

제3장 저출생 · -----

제20조(저출생 · -----

-) ① -----저출생-----

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
본목표와 추진방향
2. ~ 3. (생략)
4. 그 밖에 저출산· 고령사회정
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 ⑤ (생략)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출생

-----.

② 제23조에 따른 저출생·고령
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회의 심의-----

-----.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③-----
-----.

1. 저출생-----

2. ~ 3. (현행과 같음)
4. -----저출생-----

④ ~ ⑤ (생략)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
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
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
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
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
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

⑤ (생략)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
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
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저출생-----
-----.

-----저출생-----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저출생-----

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3조(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 · 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중 · 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5.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 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저출생 · 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생 · 고령사회정책-----
-----심의 · 조정---
-----저출생 · 고령사회위원회-----.

② -----
-----.

1. 저출생-----

2. 저출생 · -----

3. ~ 4. (현행과 같음)

5. 저출생-----

6. -----저출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30명-----.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후단 신설>

1. (생략)

<신설>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
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
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생략)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④ -----
-----.

이 경우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
명은 제3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
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3. 저출생 및 고령사회 정책에-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23조제3
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
으로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의3(시·도 저출생·고령사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회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정책기획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도위원회와 시·도 인구정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저출생-----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저출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생 략)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
-----저출생-----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민간의 참여) -----
-----저출생-----

-----.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변화가-----

-----저출생-----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
-----저출생-----

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
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①·② (생략)

<신설>

-----.

제32조(지원)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에 따른 사업수행실적이 우
수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